



## 산업자원부, 바이오에탄올 도입 본격 시동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에탄올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해 6월까지 평가 및 주관기관을 선정할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에탄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내년까지 정유·자동차 업계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이오에탄올이 휘발유와 혼합돼 제조·유통·저장되고 실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통시스템을 모색하는 한편 주기적인 시료 채취 및 시험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인프라 구축 방식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속적인 고유가와 교토협약에 따른 CO<sub>2</sub>감축 의무화로 휘발유 대체제로 친환경적인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을 6.7%까지 혼합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바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탄올 자체의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 문제와 전량을 수입에 의존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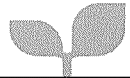
또한 에탄올 혼합 휘발유는 일정량 이상의 수분이 포함되면 휘발유와 에탄올의 상분리(相分離) 현상이 발생해 연료로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수분유입 방지를 위한 밀폐형 저장탱크 사용, 최종 출하 시점에서 에탄올과 휘발유의 라인 브랜딩 등 별도의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50억 지원

농림부는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를 도모코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유통활성화자금 50억원을 신규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및 품목조합 등 친환경농업 생산자·소비자단체이며 대상품목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쌀, 화훼, 축산 제외)이다.

자금의 용도는 출하 선도금, 원료구입자금, 계약재배 계약금, 매취자금,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등으로 다양하다. 농협중앙회와 환경농업단



체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 단체를 지난 5월말까지 제출 받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수확기 흉수 출하를 방지하고 농가의 가격보장코자 농안기금으로 마련된 친환경농산물직거래자금 200억원(연 3%)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활성화자금’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산지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수확기 흉수출하 방지와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정부, 올해 환경기술개발에 3534억원 투입

정부는 올해 3개 분야 19개 환경기술개발과제에 작년보다 285억원(8.78%)이 늘어난 3534억원을 투입한다. 추진과제에 대한 민간 투자도 1251억원에 달해 모두 4785억원대 환경기술개발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과기·환경·산자부를 비롯한 13개 부처 개발사업계획을 담은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대기·수질오염방지, 폐기물 처리·관리 등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미래핵심환경기술 개발과제에 1250억원을 쏟아붓는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높은 대기환경기준(EURO-5)에 대응한 중소형 무·저공해 경유 자동차, 산업폐기물 자원화,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술 등이다. 건설·해양·에너지·원자력 등도 유망환경기술 중점 개발과제로 포함돼 14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산업·기술을 정보화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데 159억원, 우수환경기술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327억원 등 환경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환경기술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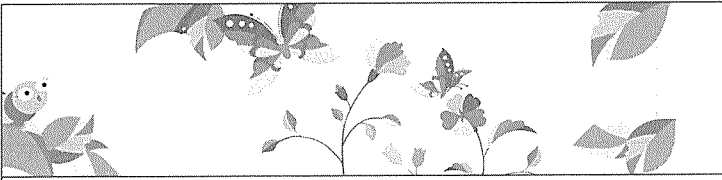
이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과학기술기본계획 2005년 추진실적 ▲2006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 2005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도 심의·확정했다.

### 해양수산부, 지속가능발전 위한 해양환경 법체제 추진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해양환경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해양환경 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해양환경관리법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



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왔으나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에 바탕을 두고 제정돼 법조문의 대부분이 기술적·집행적 사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해양환경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때문에 이번 제정안은 해양유입 또는 해양발생 각종 오염원의 통합관리 등 해양 분야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개발 중심의 국가해양정책에서 환경적 측면이 적극 고려되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적용범위 확대 ▶정도관리 제도 도입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억제하고 육상에서의 처리 및 재활용 유도 ▶해양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위의 계획들이 본격 시행되게 되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은 물론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성 확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의 근절과 민간 부분이 해양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로 해양환경 감시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9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6시그마 도입

100만 번 중 3.4회 수준의 결함발생률, 실제 업무상 실현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에러인 6시그마 기법이 정책부처 중 최초로 환경부가 도입한다. 환경부는 지난 4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이치범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6시그마' 출범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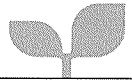
환경부 정책혁신타기기획관은 "정부 정책에 6시그마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품질향상,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2년 연속 정부혁신평가서 정책기관 중 6위로, 선도그룹으로 분류됐다"며 "하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환경행정의 고도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6시그마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6시그마 기법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관리, 수입자동차 인증 등 6개 핵심서비스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30명의 선도자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벨트별로 차등화해 247명을 실시기로 했다.

오는 2007년부터 2008년은 발전기, 2009년부터는 정착기로 정하고 계획에 맞춰 모든 직원이 6시그마 교육을 받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 관련 업무는 규제를 받는 자, 혜택을 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해 TWO-6시그마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개발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6시그마는 경영혁신에서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품질핵심요서를 선정한 후 통계와 다양한 무제해결기법으로 현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 원인 및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해 검증되면 확대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는 기법이다.

### 산업자원부, 화학·온실가스 배출저감 VA 적극화

S-Oil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주요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3일 양재동 aT 센터에서 S-Oil, 현대제철, LG필립스 등 20사 대표들과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505억원의 에너지 절약과 13만 2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계획들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자발적협약은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규제적인 제도로 에너지 다소비기업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실행방법을 제시·실천하게 되며, 정부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세제지원,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을 체결한 20개 사업장은 연간 373만9000TOE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1.7%로 전라북도의 1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5년까지 1288개 사업장이 참여했고 자발적협약 이행으로 1998-2004까지 약 2조500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데, 협약기업의 총에너지 사용량의 12.9%를 절감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양에 해당한다.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기업의 CEO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자발적협약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원단위개선을 위해 총 6개 분야에서 97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현재 86개 과제를 착수해 19개 과제를 완료하고 67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006년 3월 현재 완료된 19개 과제를 통해 2007년까지 720만7000TOE(2조162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2005년에 착수한 55개 과제가 완료되면 2007년까지 960만6000TOE(2조8818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월간지 구독 문의

· TEL : (02)852-2291 (代)

· E-Mail: keef@keef.or.kr (代)